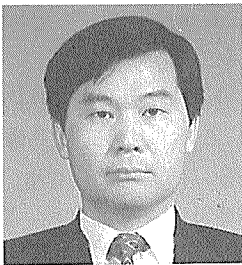


한·러 경협 증진을 위한 몇가지 제언



통 상 산 업 부
과 장 이 기 우

(전 러시아 주재 상무관)

1. 머리말

3년여의 해외생활을 하고 귀국해 보니 통산부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필자만의 느낌은 아닐 것이다. 입에 익지 않은 부처명칭, 부처 통합과 경제 부처 통합에 따른 기구축소, 수 많은 없어진 얼굴 들과 새로운 얼굴들, 사무환경의 개선, 정보화의 적극적 추진, 연찬회·통산라운지의 운영, 매일 발간되는 회보 등이 마치 필자를 긴잠에서 깨어난 Rip Van Winkle같이 만든다.

2. 시장경제국가 러시아의 건국

이러한 통산부에서 일어났던 변화를 왜소하게 만드는 격변이 필자가 지난 3년여간 상무관으로 근무했던 러시아에서 생겼다. 시장경제화, 자본주의니 민주화니 하는 용어들로서는 소련의 붕괴, 산업생산의 반감, 소모적인 보혁대립의 지속, 계속되는 치안 악화, 번성하는 조직범죄, 지방과 중앙정부의 갈등을 비롯한 러시아의 변혁을 설명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치 초강국 러시아란 나라의 실체가 과거부터 존재해왔는데 갑자기 '92년부터 시

장경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수렁에 빠져들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접근법을 취할 때에는 지난 3~4년간에 있는 러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기 십상이다.

그러나 관점을 달리하여 소련이란 국가는 존재하였으나 러시아란 국가는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고, 신생 러시아의 국민들은 '92년부터 새로운 자유민주 자본주의 국가를 건국하는 힘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러시아 국민들은 지난 3~4년의 짧은 기간에 시장경제국가 건국사업을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대로 훌륭하게 수행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게 된다.

필자가 러시아의 등장 과정이 기존국가의 제도개혁 내지 단순한 시장경제화 작업이 아니고 새로운 시장경제 국가의 건설이고, 그 건국사업이 그런대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역설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선 언론을 필두로 국민 대부분이 러시아 정치, 경제, 사회 상황의 변화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 평가와 인식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가 러시아의 경제적 잠재력을 활용할 기회를 잃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러시아가 다소의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시장경제국가 건설에 성공한다고 전제하고, 이같은 긍정적 관점에서 러시아와 우리나라의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 몇가지를 기술해보고자 한다.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분야는 크게 나누어 우리 통상산업부의 영문 명칭과 같은 Trade, Industry and Energy가 있다.

3. 통상(Trade) 증진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교역액은 '94년도에 쌍방으로 22억\$을 기록했으며, 이외에 “보따리” 장사에 의한 비공식 수출도 약 2.5억\$ 내외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95년중에는 교역액이 쉽사리 30억\$을 넘어서리라 전망된다. 그렇게 되면 아마 러시아는 독일·영국 등에 이은 유럽 제 3위 또는 제 4위의 교역 파트너가 될 것이다. 그리고 2,000년까지

는 교역액이 100억\$을 돌파할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이같은 낙관적 전망의 근거로는 (1) 러시아 산업 생산 규모가 반감된 지난 수년간의 경제적 혼란 속에서도 한·러간의 교역액이 매년 40% 내외로 성장하여 왔고, (2) 러시아 경제가 금년 후반기부터는 바닥을 치고 고개를 쳐들 것(Bottom up)으로 서방의 주요연구기관들은 전망하고 있으며(IMF는 '96년 성장율을 6~7%로 전망), (3) 러시아는 자연자원, 인적자원, 첨단기술 등 주요 경제성장 요소를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플러스의 경제성장이 시작되고, 외국자본 및 해외 도피의 러시아 자본이 몰려들어 오기 시작하면,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해 나갈 것이 예측된다. 사실 전 세계를 통틀어 볼 때, 러시아는 중국과 더불어 세계 최대의 잠재 성장지역인 것이다. 어쩌면 정치적 안정만 달성된다면, 중국보다 더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인근지역에 있는 최대성장 가능지역이 플러스 성장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이 시장개척을 위한 전략을 수립, 집행하지 않고, 새로운 시장경제국가 건국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면서 팔장만 끼고 있다면, 시장선점의 기회를 놓칠 우려가 크다고 아니할 수 없고, 신시장개척이 국가적 중대사업에도 불구하고, 신시장개척에 따르는 위험을 국가가 일부 분담해주지 않는다면 정부가 수출증대의 책임을 다했다고 하기 힘들 것이다.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잠재시장으로의 가치는 큰데 비하여 정부에서 러시아 시장개척을 위한 충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현재로서는 수출보험적용 정도이다. 이것도 '94년 하반기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으나, 인수 조건이 까다로워 거의 이용실적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출보험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상은행 확대, 부보범위확대 등의 인수조건의 완화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WTO체제 아래에서 수출보험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수출보험이 상당한 적자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한 보험인수를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 러수출은 수송거리(1.5개월 정도)가 길어, 유럽, 중국 등 인근국가와의 경쟁에 불리하다. 러시아는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자율도 높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 등 수송거리가 짧은 국가와의 경쟁에서 이기고 대러 수출을 증진하는 데에는 현지 보세창고를 활용한 저장판매(Stock Sales)가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규모 전자업체(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등)는 모스크바 등 주요 도시에 보세창고를 운영하고 있거나 추진중이다. 문제는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이 러시아의 주요도시에 개별적으로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데에는 비용과 관리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 중소기업의 대러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선 민간기업 또는 무역진흥공사에게 정부예산 또는 수탁자금을 지원하여 모스크바 등 주요 도시에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긴 수송거리가 한·러간 무역증진의 장애요소로 등장하는 또 하나의 측면은 극동항구 적체 문제이다. 한·러, 일·러간에 블라디보스톡 등 극동항구를 이용한 교역량이 급속 증가함에 따라 극동항구의 적체현상이 심화되어, 대선기간과 선적·양륙기간이 길어져서, 수출품의 적기인도와 가격경쟁력에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러시아 경제의 회복에 따라 한국, 일본, 대만, 호주 등 태평양 연안국가와의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극동항구지역에 전용부두, 하역시설, 창고시설을 확보하고 또한 가능하면 극동항구 지역에 합작 운송회사, 운송주선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영리성의 기초 위에서 민간기업이 투자를 함이 바람직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러시아 시장의 잠재적 중요성에 비하여 여러가지 투자위험이 따르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의 유인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러시아에는 L/C를 발행할 사회적 여건(특히 신용 및 담보제도)이 성숙되지 않아 사실상 L/C발행이 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 수입업체가 L/C발행을 거래은행에 의뢰하면 거래은행은 100% 증거금(Margin)의 입금을 요구하는 것이 관례인 것이다. 이 경우 수입 업체의 입장으로 보면 100%의 증거금을

납부하고 L/C를 발급받아 수입을 하느니, 한국수출업체에 20~30%의 선도금을 지급하여 한국 수출업체에게 제품생산을 착수시키고, 부산항에서의 선적 준비완료 통지(Notice of Readiness)가 오면 50% 내외의 증도금을 지급하고, 블라디보스톡항에 제품이 도착하면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중소기업이 선도금을 받고 수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최근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 러시아 상인들이 우리 중소기업체와의 수입계약 체결을 주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양국간의 호혜적인 무역증진을 위해서는 러시아의 결제관행을 악용하여 선수금을 받고 선적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량제품을 선적하는데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러시아 뿐만 아니라 동구 등 구공산권으로부터 선수금을 받고 수출을 할 때에는 수출의무이행보증보험증서 구입을 강제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수입업체가 수입선수금을 지급하고 수입하는 경우에 러시아 수입업체가 한국 수출업체에 수출이행보증보험증서 구입을 요청하도록 여러가지 통로(러시아 신문광고 등)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4. 산업(Industry) 협력 증진

러시아는 우주, 소재, 광학, 항공산업 등에 있어서 고도기술과 고급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러한 기술과 인력은 소위 군수 산업체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러시아 군수산업은 '92년 경제 자유화로 인한 보조금과 국가 주문의 대폭적 감소로 인하여 대부분의 업체들이 심각한 존폐의 위기에 처하여 있고 이들 위기속의 기업들은 외국기업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한 민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리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은 모두가 주지하는 바이다.

석유, 가스 등 자원 채취산업을 제외하고는 러시아는 서방선진국과의 산업협력이 부진하다. 우리나라와의 산업협력도 마찬가지로여서 한·러 산업협력은

아직도 모색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우리기업들은 러시아가 아직도 정치, 경제, 행정적으로 우리 투자를 받아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러시아의 첨단기술 도입이나 공동기술개발은 해 볼만 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하여 대기업들은 러시아의 첨단기술인력을 장·단기 계약으로 한국으로 유치하거나, 기술개발 계약을 체결하여 러시아내에서 기술개발을 위탁하거나 공동개발하고 있다. 지난 1~2년사이에는 과거처의 지원을 받아 정부산하 각종 기술연구소나 대기업들이 연구분소를 러시아 내에 설치하여 첨단기술개발·공동개발·위탁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기술적 잠재력에 비하여 산업기술협력 실적은 미흡하기 짝이 없고 기술 선진국인 미·일·독 등이 러시아 기술과 기술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정도에 비교하면 보잘것 없는 것이다.

러시아의 정치, 경제적 불안정과 제도적 하부구조의 취약상을 고려할 때 대규모 직접투자 등 한·러 산업협력의 본격적인 추진은 시기상조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기대되는 러시아 경제의 회복, 미·일·독 등 선진기술 대국의 고급기술 이전회피 경향, 경제적 애로 상태에 있는 러시아 기업체, 연구소로부터의 기술의 염가도입, 공동개발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이 러시아 기업, 연구소로부터 애로기술을 도입하거나 공동연구 개발하는 작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러시아와의 산업협력에는 아직도 불확실성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은 많은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산업기술 협력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여기에 우리 중소기업들과 러시아 산업체, 연구소간의 산업기술 협력을 촉진하는 유인장치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게 된다.

우선 하루 빨리 양국 정부간에 산업협력위원회가 상설화되어 양국간에 산업협력의 대체적 방향설정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이 대 러시아 산업기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협력에 약간의 재정적·행정적 유인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산업기술정보원 산하의 한·러 산업협력센터와 생산기술연구원의 지원하에 한·러 산업기술협력(도입·공동연구개발 등)이 성사되면, 공업발전기금 등에서 우선적 지원이 나갈 수 있게 하는 장치의 개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니면 중소기업이 러시아 등 외국 소재 기업, 연구소와 협력하여 상용 산업기술을 연구·개발·상용화 하는 사업에 금융지원(보조금, 융자 등)을 하기 위한 재원을 예산에서 마련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여러가지 재원(정부 및 민간)으로부터 한·러 산업기술협력기금을 조성하여 한·러간의 산업기술협력에 대하여 연구단계부터 상용화 단계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방안(공업발전기금 활용 등)도 검토할 만 할 것이다.

러시아와의 산업기술협력이 중요성을 더해가는 것은 (1) 미·일 등 기술선진국들은 고급 기술이전을 기피하면서 기술보안을 더욱 강화하는 추세에 있는데 반하여 (2) 러시아 산업체·연구소들은 경제적 애로로 인하여 한국과의 산업기술 협력을 희망하고 있고 또한 아직까지는 염가로 러시아 기술을 도입하거나 공동개발 할 수 있으며 (3) 우리제품의 국제경쟁력이 기술력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가고 있으나 기초기술의 취약과 기술인력의 부족으로 우리 기업(특히 중소기업들)이 고유의 독자기술을 개발하는데에는 한계가 있고 (4) 우리 중소기업들은 정보부족, 실패의 위험 등 때문에 선뜻 러시아 산업체, 연구소와의 기술협력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에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해 두고 싶다.

5. 자원(Resource) 협력증진

러시아가 자원부국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러시아의 미개발 자원 보유량은 대략 30조 US\$에 달한다고 한다. 러시아가 시장경제 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경제적 혼란속에서도 파탄하지 않고 버티나가는 힘도 자원수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80년대 후반 이후 소련의 붕괴 과정에서 동구 아프리카 등의 무기시장과 기계류시장을 상실한 러

시아의 수출구조를 보면 약 70%가 자원수출이며, 자원수출 비중은 아직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원의 대부분을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자원빈국 우리나라는 인근에 자원대국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것은 어쩌면 다행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 문제는 인접국 러시아의 자원을 개발하여 국내에 들여오는데 있다. 러시아의 자원개발은 유럽쪽에서부터 시작하여 동쪽으로 이동해 오고 있다. 유럽과 거리가 먼 동부 시베리아 및 연해주 지방의 자원은 잘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우리가 러시아와의 자원협력을 추진한다면 수송거리가 가까운 동부시베리아 극동지방이 우선 순위에서 앞설 것이다.

러시아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에는 사회적 물적 하부구조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들의 대러투자는 석유, 가스 등 대규모 자원개발 투자에 집중되고 있고, 투자와 관련된 법제, 제도상의 문제점은 구체적인 투자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결해 나가고 있다. 사회적, 물적 하부구조가 완비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선진제국에 비하여 자본력과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나라로서 이웃 국가 러시아의 자원을 활용할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자원개발에는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고 실패의 위험성이 항상 수반되기 때문에 한두개의 민간기업이 투자하는 것은 힘들다. 민간부문의 자원개발사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심 기업들의 콘소시엄 구성을 유도하고, 장기적 측면에서의 자원 공급원의 확보란 전략적 관점에서 러시아에서의 중요 자원개발 사업의 타당성 조사 사업에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6. 맺음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러시아의 전환기적 애로를 확대 포장하거나, 러시아 국민들이 시장경제국을 건국하기 위해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고 있으며, 시장경제국이 건설의 노력이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다는 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러시아 경제는 가격 자유화와 민영화의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서 가격메카니즘이 착근을 해 나가고 있고, 거시경제지표는 안정화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대 다수의 서방 예측 기관들은 러시아 경제가 금년말 또는 내년초부터 상승곡선을 그릴 것이라고 전망한다.

러시아는 자원, 인력, 기술 등 주요 성장 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기능의 회복 등 시장경제체제 정립의 기초가 확실히 잡히고 플러스 성장이 일단 개시되면,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해나가는 세계최대의 성장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경제와 우리경제는 자원의 풍부 對 빈곤, 발달된 중공업 對 소비재산업, 발달한 기초, 첨단 과학기술 對 상용화 기술과 자본력 등에서 보듯이 완벽한 보완 관계를 갖고 있고, 중국과의 협력에서 나타나는 Boomerang 효과에 대한 우려도 없다. 따라서 양국간의 통상, 산업, 기술협력의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러시아 경제가 지금 당장 어려운 상태에 있다 하여 21세기의 최대 성장시장을 상실하거나 타국에 의해서 선점당하게 방치하는 과오를 저질러서는 안될 것이다. 민간부분은 단기적인 영리추구의 속성 때문에 몇년 후를 내다보는 전략적 접근법을 택하기가 쉽지 않다 할지라도 정부는 상당한 정도의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적 정책을 수립·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적재산권 보호만이 기술개발을 앞당깁니다